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

제안설명서



2024. 6.

박종길 의원

제안설명서

제안자: 박종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생활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주민의 교육지원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평가 및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53
----------	----------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의자: 박종길, 장호섭, 서민우,
정순옥, 고명옥, 박정환,
임미연, 정창근, 김정희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생활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교육지원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사업지원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사업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

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구청과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